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4-03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8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2015누5803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
원고, 항소인 주식회사 A

[redacted]

피고, 피항소인 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
[redacted]

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. 8. 20. 선고 2014구합71627 판결

변 론 종 결 2019. 1. 11.

판 결 선 고 2019. 2. 8.

주 문

1.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

2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
3.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4-03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가 2014. 8. 26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91,502,380원, 농어촌특별세 47,450,730원, 가산세 183,005,180원의 부과처분 및 등록세 291,502,380원, 지방교육세 89,596,150원, 가산세 185,628,7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4. 8. 26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91,502,380원, 농어촌특별세 47,450,730원의 부과처분 및 등록세 291,502,380원, 지방교육세 89,596,1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.

이 유

직권으로 판단한다.

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,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(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).

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. 11. 30.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.

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, 소송총비용은 행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4-03

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재영

판사 신숙희

판사 이승철